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6면	강원도의회 강원FC강릉 시즌권 단체 구매	1
강원도민일보	09면	"외교 안보 · 지역 발전 동시 만족할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1
강원도민일보	09면	"남북 · 국제협력 이끄는 시발점 조성해야"	2
강원도민일보	09면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 획기적 발전 전환점"	3
강원도민일보	03면	"국정교과서 찬성" 김광래 후보자 도립대 총장 자격 검증	4
강원도민일보	05면	도내 스톡킹 신고 하루 평균 3건꼴... 1년새 두 배 늘어	4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춘천 봄봄 사랑나눔 이불빨래방 개소식	5
江原日報	02면	봄봄 사랑나눔 이불빨래방 개소	6
江原日報	10면	‘ 춘천 봄봄 사랑나눔 이불빨래방 ’ 개소	6
CBS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학운위 부당 운영, 손 보겠다"[1/2]	7
CBS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학운위 부당 운영, 손 보겠다"[2/2]	8
江原日報	18면	[확대경] 인류 발전 원동력 다문화의 소중함	9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9
江原日報	23면	김진태 지사 · 회원 29명 전원 동참 “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	10
江原日報	04면	“ ‘ 낭만조퇴 ’ 로 왜곡된 학교문화 바로잡을 것 ”	11
 KBS 춘천		강원도, 축산업 142억 원 투입...친환경 산업 육성	12
강원도민일보	02면	정부 기조 연동 강원도형 미래산업 육성 추진	13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도청 '고은리 373번지' 행정타운 중심부 이동	14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특수교육원 유치 과열에 건립지역 이달 내 결정	14
강원도민일보	06면	"벤처기업 소통 강화하자" 이달 강원지회 출범	15
江原日報	01면	조선왕조실록 · 의궤 빠르면 9월 평창 돌아온다	15
江原日報	04면	월 1천만원 ... 학교도 요금 폭탄	16
江原日報	05면	코로나 · 경기악화에 자원봉사자 반토막	16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서민 고통 시장금리 조정할 때	17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지방대 육성 교육부 아닌 범정부 조처 필요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도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폐교 활용 모델 되기를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특별자치도 지원 첫 회의, 지역 사정 잘 설명해야	20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15일 (수)

인물 26면



강원도의회 강원FC강릉 시즌권 단체 구매 강원도의회 (의장 권혁열)는 최근 강릉에서 강원FC강릉 시즌권 구매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날 권혁열 도의장과 심오섭·박호균·최승순·김용래 도의원이 참여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15일 (수)

특집 09면

“외교 안보·지역 발전 동시 만족할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접경지역 발전전략 DMZ 포럼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접경 지역 발전 전략 DMZ 포럼'이 지난 13일 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와 정전 70주년을 맞아 DMZ가 외교안보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강원도 접경지역이 경제안보뿐 아니라 북한과의 청정에너지 개발, 농산품을 통한 식량안보 문제 해결 등 정치색이 없는 단계의 신협안보 협력 방안을 대응해볼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1·2 세션 토론 내용을 싣는다.



지난 13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1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서영



지난 13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접경지역의 실천적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2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영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15일 (수)
특집 09면

세션Ⅱ. 접경지역의 실천적 발전 전략

“남북·국제협력 이끄는 시발점 조성해야”

토론

◇좌장=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토론=△이영성 서울대 교수 △엄윤순 강원도의회 접경지역지원특위위원장 △김일용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장

이영성 “하소연 아닌 국가지향 정책 논의를”

엄윤순 “군납 농산물 경쟁입찰 철회해야”

김일용 “접경지역 첨단고도화산업 추진을”

이준식 “주민 등 거버넌스 강화 호흡할 것”

현진권 “유일무이 DMZ 먹거리 무궁무진”

△이영성=“애로사항, 하소연보다는 국가지향하는 정책을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장기적 정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없으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하기 쉽지 않다. 강원도는 희망없는 지역이 아니다. 2050년 기준으로 인구변화 추세보게 되면 인구증가 지역이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 몇 안된다. 2010~2022년까지도 강원도 곳곳에서 인구증가 지역이 보인다. 강원도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 바이오 등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많다. 지금까지 지역발전 전략이었던, ‘못사는 데 떡하나 더 줘’, 이런 것 말고 대한민국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과 협력하고, 국제협력이끄는 시발점을 조성하겠다는 자세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다.”



△엄윤순=“군납 농산물 경쟁입찰 철회와 DMZ권역 국산 목재 유통센터 조성을 제안드린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돼있는 평등, 생존, 사유재산권, 기본권 등을 보장 받지 못해 정부로부터 보상받아야 할 때다. 공장 하나 없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버티고 살아온 것, 농업이다. 이런 주민들에게 군납 농산물을 공개경쟁 하겠다고 국가가 나서서 주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 목재유통센터 설립을 건의드린다. 축산농가에서 쓰는 톱밥은 90%가 수입인데, 농가에서 쓰는 비료나 곤충산업 원자재로서도 활용



돼야 한다. 도의회에서도 접경지역지원특위를 구성, 경제발전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

△김일용=“고성군은 동해북부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전략 측면에서, 강원도에서 끊어진 9km를 연결해야만 경제권을 주도할 수 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펼쳐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성군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안타깝다. 접경지역도 생태, 관광, 평화만으로 다가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첨단고도화산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스포츠와 같이 시공간을 초월한 산업이 필요하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볼링이 빠지고 이스포츠가 들어갔다. 브레이크댄스 종목도 채택됐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IT 기반 산업들이 지원되면 좋겠다. 접경지역 내 투자선도지구 우선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특례 조항이 반영됐으면 한다.”



△이준식=“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사업은 다 부처 사업이다. 행안부가 중심이 돼있지만 국토부, 문체부 등 여러 부처 사업이다. 시·도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통보하는 구조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총괄 기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또, 지자체 주민들, 전문가와 같이 거버넌스를 강화해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구소멸지역은 우선반영돼야 하는 부분이다. 다른 사업과 긴밀하게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사업 선정을 고려하겠다.”



△현진권=“이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서 자율을 갖는다. 통일안보정책과 지역발전은 더이상 대치, 경쟁 관계가 아니다. 지금 안보라는 것은 전방, 후방이 따로 없다. 70년 전과 다르다. 우리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DMZ는 지금까지 남북 원한의 땅이었지만 먹거리가 무궁무진한 곳이다. DMZ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이데올로기로 인해 대치하는 유일한 21세기 땅이다. 이스포츠를 하게 되면 전 세계 언론이 중계할 거다. 비즈니스, 먹거리를 찾는 데 좋은 기회다. 외교안보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왔다는 것, 제가 생각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DMZ에 대한 의미다.” 정리/정승환·이철화·김덕형



▶토론 전문 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15일 (수)

특집 09면

세션 I.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대응전략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 획기적 발전 전환점”

토론

◇좌장=김인영 한림대 부총장

◇토론=△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양철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한권 “미중 진영구도 분리 대중정책 도움”

이기찬 “접경지역 내부 동력갖춰 발전해야”

양 철 “강원미래산업 글로벌 전략 연계”

허재철 “에너지 등 신항안보문제 선제 대응”

김인영 “발전전략 수립 심도있는 논의 필요”

△김한권=“동북아정세는미중경쟁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최근 신냉전이라는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건 미중 진영화 구도가 정치 차원에서 가치와 체제 문제, 외교 분야에서 대외 전략, 군사·안보 분야에서 미중간 완력다툼으로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 삼각구도로 가고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시된다. 이런 진영화 구도 속에 한국이 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활용 할지 논의의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부분에 대해 한중이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 진영화 구도와 분리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중정책을 펴는 것이 현 상황에서 도움 이 될 수 있다.”



△이기찬=“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는 휴전선을 머리에 이고 사는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어려운 현실이다. 현 상황에서 외부적인 요인을 통한 지역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부적인 동력을 갖춰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의 전환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특별자치도는 진짜 하는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제주도가 6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기회 삼아 접경지역을 비롯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양철=“제주의 경우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의 정의가 다른 법에 명시돼 있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미래산업’은 그 정의가 다른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강원도가 추구하는 미래산업이 무엇인지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바이오 의료기기, 수소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고 반도체와 데이터 등 첨단산업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데니 이에 필요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확실한 방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다. 미중기술경쟁 구도에서 강원 미래산업을 어떻게 글로벌 전략과 연계시킬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



△허재철=“최근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제안보’ 시대가 도래했다. 경제안보시대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동북아에선 대만해협 관련 문제인데 한반도의 군사력이 대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이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 이럴 경우 접경지역인 강원도는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특별자치도 시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 에너지와 보건안보 등 신항안보 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과의 청정에너지 개발, 식량안보 문제 해결 등 정치색이 짙은 단계의 협력방안을 마련해 미래의 다양한 신항안보 문제를 대응해 볼 수 있다.”



△김인영=“올해는 정전 70주년이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있는 뜻깊은 해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개막과 정전 일상화 시기를 맞아 접경지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접경지역 발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주 영동북부지역을 다녀와 보니 지역 곳곳에 고도제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현수막이 대거 붙어 있었는데, 그 지역의 분노와 좌절,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발전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스파이풍선 사건 등으로 미중갈등은 더욱 격화될 기미를 보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 지를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15일 (수)

종합 03면

“국정교과서 찬성” 김광래 후보자 도립대 총장 자격 검증

도의회,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직도 국정교과서 찬성하나 질문에
“너무 편향돼 균형 잡아야 생각”
특위, 내일 경과보고 채택 심의

도의회는 14일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찬성 의원은 (원주·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지 지 교수 102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맞느냐. 아직도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데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 세력이 역사를 규정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14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제11대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 후보자 도의회 인사 청문위원회(위원장 최재석)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영

김 후보자는 “지금도 너무 편향돼 있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보수 성향의 대다수

도 여기(국정교과서)에 대해 현재 반 대를 하고 있다”며 “대학의 특성상 정치 적으로 이용하기 쉽다. 후보자의 정치 적 경력을 봤을 때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복(고성·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대표적인 폴리페서 (Polifessor)인데 도립대 총장 재직 중 중앙정부에서 일 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후보자의 이력을 나 열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사무처장,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지역 난방공사 상임감사를 지냈다. 이에 대 해 김 후보자는 “중앙정부에서 미숙한 사람을 제안도 안하겠지만, 한다면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엄기호(철원·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6년 분양가 8억7200여 만원의 원주 반곡동 상가를 매입한 사 항 등 부동산 이력을 물었다. 엄 의원은 “대출을 5억여원을 받았다. 원주 상가 를 취득할 때, (강릉 소재) 관동대에 재 직 중이었을 텐데 매입 이유가 무엇이 나”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노후 적정으로 산 것”이 라며 “원주가 옆 동네이고, 그 당시 확실 한 투자처로 여겨져서 샀다. 지금은 (가격이) 분양가의 80%다. 반이 공실” 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청문위원들은 도립대학교 로서의 역할, 도립대 소속 교수진 연구 활동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인사청문 특위는 오는 16일 도의회에서 3차회의 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여 부를 심의한다. 이설화 lff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15일 (수)

사회 05면

도내 스토킹 신고 하루 평균 3건꼴... 1년새 두 배 늘어

4개월 정도 교제한 연인과 헤어진 A(34)씨는 결별한 지 6개월이 지 난 시점에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주로 ‘보고 싶다’, ‘사랑한 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집앞에 가방과 선물을 두고 가는 행위도 반복됐다. 불 안과 공포를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 했고, 춘천지법은 B씨에게 징역 6개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0대 여성인 요양보호사 C씨는 요 양보호 서비스를 하며 알게 된 남 성 D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당했다. C씨 의 신고로 춘천지법은 D씨에게 접근금

지난해 신고 건수 총 1155건

10대 제외 전 연령·여성 82.5%

예방·피해자 지원 필요 제기

박찬홍 도의원 관련 조례 발의

지·연락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D씨는 C 씨의 집을 집요하게 찾아갔다. 춘천지 법은 D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 지만, 연간 1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 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나이를 가리 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강원 경찰청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관련 신 고 건수는 총 1155건이었다. 앞선 2021년(574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 났다. 하루 평균 3.2건 꼴이다. 112신 고가 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소 137건, 상담 등 기타 70건이었다. 경찰

은 이 가운데 316명을 검거, 2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스토킹 범죄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발 생했다. 검거된 316명에게 스토킹을 당 한 피해자는 20대 73명, 30대 60명, 40 대 59명, 50대 59명, 60대 이상 55명으 로,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고르 게 나타났다. 피해자는 여성이 274명 (82.5%), 남성이 58명 (17.5%)이었으 며, 피의자는 남성이 258명(81.5%), 여 성이 58명(18.4%)이었다.

이처럼 도내 스토킹 범죄가 지속하 면서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필

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실제 박 찬홍(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최근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 에는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운영, 주 거·자립지원 서비스, 상담·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 점”이라며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스 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지켜본 뒤 도내 상황에 맞는 조례를 도입하겠다”고 말 했다. 배상철 bsc@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2월 14일 (화)

사회

[포토뉴스] 춘천 봄봄 사랑나눔 이불빨래방 개소식



춘천 봄봄 사랑나눔 이불빨래방 개소식이 14일 스무숲1길 36-7에서 김진태 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춘천 봄봄 사랑나눔 이불빨래방 개소식이 14일 스무숲1길 36-7에서 김진태 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춘천 봄봄 사랑나눔 이불빨래방 개소식이 14일 스무숲1길 36-7에서 김진태 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14일 춘천시 스무숲 일대에서 열린 봄봄 사랑나눔 이불빨래방 개소식 행사가 골목길 통행을 제한하며 진행돼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골목에서 배달하던 택배기사가 행사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江原日報

2023년 02월 15일 (수)
종합 02면



봄봄 사랑나눔 이불빨래방 개소 춘천 봄봄 사랑나눔 이불빨래방 개소식이 14일 스무쉴1길 36-7에서 김진태 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관희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10면 신세희기자

江原日報

2023년 02월 15일 (수)
지역 10면

‘춘천 봄봄 사랑나눔 이불빨래방’ 개소

【춘천】강원형 공공 이불빨래방 제12호점인 ‘춘천 봄봄 사랑나눔 이불빨래방’이 14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정재웅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관희 강원도의원, 전기완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이택수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부장 등이 참석했다.

‘봄봄 사랑나눔 이불빨래방’은 도와 춘천시의 사업비 외에

한력전력 강원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지사에서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후원했다. 춘천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0명이 춘천 10개 읍·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물 수거 및 세탁 배송뿐만 아니라 말뒹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은 취약계층들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뿐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 30개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사업”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학운위 부당 운영, 손 보겠다"

강원CBS 진유정 기자
핵심요약

"오랜 기간 학운위 임원 규정 위반 사실 확인" 개선 의지 밝혀
강원도의의회에서도 '관리 감독 강화' 요구



14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임원 선임 문제 등을 감사하고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유정 기자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위) 일부 임원들이 '무자격' 상태에서 임기를 유지하고 도교육청 형세로 활동했다는 보도(CBS노컷뉴스 1월 26일, 28일, 2월 7일, 2월 9일자)와 관련해 강원도교육청도 관련 조례를 보완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기자 간담회에서 "오랜 기간 학운위 임원들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면서 장기간 임원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강원도의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알게 됐다. 학생과 학교를 위해 즉시 조례를 다시 손보겠다"고 말했다.

학운위는 '학부모'들이 주체가 돼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역위원'들의 관행적 연임과 정치적 개입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임기가 끝나자 지역위원들이 학교를 옮겨 또 위원을 한다. 위원장은 학부모 위원들이 하면 좋겠다. (각)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운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조례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BS

2023년 02월 14일 (화)
강원

강원도교육청 자료 분석 결과 2019년 학운위 임원 절반 가량이 무자격 임원 신분인 상황에서 강원도 교육청은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국외연수 명목으로 학운위 임원 8명, 공무원 3명과 함께 독일과 이탈리아 국외 연수를 진행했다. 1인당 약 420만원, 총 4천 6181만원 예산이 사용됐다.

2020~2022년 3년 간 강원도교육청이 무자격 임원들이 포함된 학운위에 지원한 예산은 2020년 875만원, 2021년 190여만원, 2022년 258만원으로 약 1300만원에 달한다.

신 교육감은 "학운위에 대해 감사원 뿐 아니라 저희 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촘촘하게 검토하고 조례를 수정 보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운위는 교육 현안과 관련해 교육장·교육감 등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정책에 찬반 의사를 표하는 대의기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등 대부분 지역위원으로 채워져 있고 전, 현직 시의원도 포함돼 있다. 반면 학부모 위원은 단 1명뿐이어서 공평한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원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학운위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임원구성 편향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철 의원은 "(학교 당사자인) 학부모 위원장은 18개 시군 중 3명이며 대부분 지역위원장이다. 특히 지역위원 중 영동과 영서지역 할 것 없이 2014년부터 수석부회장, 감사 등 계속 학운위 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학부모 위원장들이 많아져 되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CBS 진유정 기자

江原日報

2023년 02월 15일 (수)

오피니언 18면

인류 발전 원동력

다문화의 소중함

박길선



박길선
도의회 다문화연구회장
교육위원장

늘 내 곁에 있으면 우리는 자칫 그 존재와 가치를 잊곤 한다. 공기 와 물, 숲처럼.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결혼이주여성, 즉 다문화가정의 주부들과 그 아이들의 존재 가치가 그런 것 아닌가 한다. 다문화주부들을 보는 시각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왜곡된 면이 남아 있다. 흑인보다 백인이 우월한 듯, 동남아인보다 한국인이 우월한 듯 보는 잘못된 시선을 생활현장에서 가끔 느낄 때가 있다.

그런 인식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 진실이 빠져 있다. 인류 역사와 문명, 문화는 문화의 혼종과 혼효, 즉 다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문명 발전을 다문화가 견인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잊은 맹목적 인식의 결과가 피부색 출신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문명도 아무르인 아시리아인 아람인 칼데아인 유대인이 뒤섞여 창조한 다문화 문명이었다. 이후의 모든 역사적 전환과 발전은 문명의 충돌, 문화의 교류 위에서 이뤄졌다. 다문화는 인류 역사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다문화가 우리의 삶에 선사하는 구체적 가치는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들뜬에 비만 재배한다고 치자. 벼가 병에 걸리면 다 굶어 죽는다. 다행히 벼 외에 보리 밀 콩 과일 야채 가축을 재배한다면 벼가 잘못돼도 우리는 살아 남는다. 바로 다문화의 소중함이다.

백의민족, 한민족의 순수혈통을 강조해 온 우리에게 이미 한인 몽골인 만주인 일본인 동남아인 서양인들의 피가 오래전부터 섞여 있었다. 장영실의 아버지는 중국인이었다. 피가 섞일수록 후손들은 우수해진다. 중세유럽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가문은 근친혼을 일삼다가 줄줄이 기형아를 낳고 멸문(滅門)에 이른다. 백의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합스부르크일뿐이다.

글로벌 시대가 된 지 오래다. 외국인주부들, 다문화가족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다. 자녀들은 자연스럽 게 2개 국어를 배운다. 영어까지 하면 3개 국어. 글로벌 시대의 역군으로 세계를 누빌 수 있다. 국비를 들여서라도 양성해야 할 인재들이다. 더구나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농촌에 그나마 다문화주부들이 있기에 우리는 '어린 천사들'을 보며 행복감을 느끼곤 한다.

강원도의회에는 '다문화연구회'가 설립돼 10여명의 도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필자는 연구회장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 다문화연구회는 생활밀착형 지원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 먼저 도민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다문화가족들의 애로사항 직접 청취 및 해결책모색, 다문화단체 설립 지원,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지체 해소 등 할 일은 너무나 많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예산 문제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최고 난제는 돈(취업) 교육이다. 연구회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해법을 제안할 수는 있다.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족들께서도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15일 (수)

인물동정 17면



강정호(속 달식에참석한다.

초) 도의원
15일
오전 9시
30분 속초

시청에서 국민의힘 속초시당원협의회가 주관하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전

3·1절 건강달리기대회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 마라톤동호회 강마회 회원들이 3·1절 기념 시민건강달리기대회 참가 의지를 다지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태 지사·회원 29명 전원 동참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위해 질주”

도청 마라톤 동호회 ‘강마회’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청 마라톤동호회 강마회를 비롯한 도청 직원들이 제24회 3·1절 기념 시·군민 건강달리기대회에 대거 출사표를 던지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가치를 걸고 달린다.

다음 달 1일 강원지역 18개 시·군에서 강원일보사 주최, 강원도육상연맹 주관으로 제64회 단축마라톤대회 및 제24회 시·군민 건강달리기대회가 개최돼 김진태 지사는 춘천 대회 10km 완주에 도전한다. 비서실 직원들도 전원 동참할 예정이다. 20년 이상의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도청 마라톤 동호회 강마회는 29명의 회원 모두가 이날 레이스에 동참한다.

매년 전국의 권위 있는 레이스

에 도전하고 있는 강마회는 3·1절 달리기대회를 통해 한해 레이스의 첫 테이프를 끊고 있다.

특히 강마회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마라톤동호회, 일본 돗토리현 러닝클럽과 교류협약을 하고 교환레이스를 갖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순하(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 배뉴운영부장) 강마회 회장은 “6월 강원도민의 숙원인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원년이자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3·1절 마라톤이 하나의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다”며 “2023세계산림엑스포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강원도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대회로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년 02월 15일 (수)
사회 04면

“‘낭만조퇴’로 왜곡된 학교문화 바로잡을 것”

〈금요일에 일찍 조퇴〉

신경호 교육감 잇단 언급 주목... 학교장 정책 과정 중심 보장 약속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잇따라 ‘낭만 조퇴’라는 말을 언급해 교육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 교육감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차담에서 “낭만 조퇴를 아느냐. 저도 ‘낭만 조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금요일에 일찍 조퇴를 하는 것인데 학교가 공동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교사의 근퇴 문제를 학교장이 관리할 수 없게 돼 있다. 앞으로는 교장 선생님들의 권한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학교장이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신 교육감이 ‘낭만 조퇴’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일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3 학교장 공동연수(특수·중등)’에서도 학교장이 실질적인 정책 및 교육과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오후에 학교에 교사가 없어 연수나 회의, 학생 상담이 안 된다는 걱정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연가, 조퇴, 외출 등 법적 복무 지침이 잘 준수되도록 해 ‘낭만 조퇴’라는 말로 상징되는 왜곡된 학교문화를 학생중심 교육문화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예술 강사나 스포츠 강

사 등 외부 강사 수업 시 협력수업 지침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겠다. 교장 청렴도 평가 문항을 현실화하고 학교 및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신 교육감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올해 7월5일(초등), 7월12일(중등)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등은 4~6학년으로 지난해와 같고, 중학생 1학년까지 확대해 전 학년이 참여할 수 있다.

신 교육감은 “전체 응시 학생을 기준으로 한 백분율을 추가로 공개하려고 한다. 충분히 복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잘 세우겠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

KBS 춘천

2023년 02월 14일 (화)
강원

강원도, 축산업 142억 원 투입...친환경 산업 육성



강원도는 올해 13가지 축산업 육성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축산분뇨 악취 저감 75억 원, 가축분뇨 자원화 48억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19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와 환경오염 등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축산업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박성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15일 (수)
종합 02면

정부 기조 연동 강원도형 미래산업 육성 추진

도 정부 업무보고 대응전략 회의
김 지사 “국비 확보에도 힘써야”

반도체·모빌리티·신재생에너지·바이오 산업 등 국가 미래 전략산업 추진과 연계한 강원도형 미래산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강원도는 14일 오후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김진태 지사와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업무보고 대응 전략 회의를 가졌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도정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 정책과 연동되는 총 110건의 강원도 연계 사업을 대상으로 대응전략이 논의됐다. 올해 정부의 주요 정책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 인력양성, 규제혁신, 지방시대 구현, 교통망 확충, 경제·민생 지원 등이다.

이와 연계, 도는 민선 8기 도정 핵심 공약과 연계성이 높은 핵심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지방시대 구현 정책 기조에 맞춰 대응전략을 수립, 선제적 대응

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도는 원주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도는 올해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절차에 본격 착수한 데 이어 교육부의 반도체 대학특성화대 신설,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정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반도체 교육센터를 출범시키며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규제혁신 및 지방시대와 관련해선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반 구축에 주력한다. 도는 정부 규제혁신 방향을 반영해 도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덩어리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달 8일, 강원도청에서 열린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 미래먹거리 육성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위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며 “부처별 핵심 정책에 맞춰 국비 확보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승환·김덕형

강원도청 '고은리 373번지' 행정타운 중심부 이동

신청사 건립부지 최종 확정
다원·학곡지구 대규모 개발
우회·계획도로 인접성 고려
내달 도시계획위 변경안 심의

속보=강원도가 신청사 건립부지 세부 위치를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본지 2월 14일자 4면)으로 최종 확정했다.

수도권·강원 남부권·강원 북부권 간 접근 편리성 확보를 위해 국도 5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신설 추진과 연계해 신청사 건립부지 위치를 조정했다.

강원도는 14일 도청에서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브리핑을 갖고, 신청사 건립부지를 기존 춘천 동내면 고은리 443번지 일원에서 373번지 일원(10만㎡)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 부지는 당초 행정복합타운 조성예정지의 서쪽 외곽지역에 위치했으나 이번 위치 변경에 따라 대동산방면으로 300m가량 더 들어가 중심부로 이동하게 됐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다원지구, 학곡지구 등 춘천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 신설 추진 중인 대체 우회도로와의 인접성, 행정복합타운 내 도시계획도로 노선 등을 고려해 위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춘천시의회와 주민열람 공고(2월 16일~3월 2일)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변경안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는 3월 중 열린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도는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화한다. 이와 관련, 도는 올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신청사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중앙투자심사는 내년



14일 발표된 강원도 신청사 건립부지(붉은 선 네모 안) 세부 위치도. 강원도청 제공

초 진행한다.

보상절차도 본격화한다. 도는 5월 중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절차에 착수, 내년 안에 보상을 완료한다. 각 절차가 계획대로 이행되면 신청사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된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신설과 관련, 도는 5월까지 사전 기획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반영을 건의한다.

춘천시 동면 만천리와 신동면 정족

리 구간 8.3km를 4차선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국비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부동산 난개발, 투기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전부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강원도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부지 매입과 건립비로, 나머지는 도시개발방식으로 강원도개발공사와 춘천도시공사가 자금을 확보해 토지 매입을 하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정승환·이설화

강원특수교육원 유치 과열에 건립지역 이달 내 결정

도교육청, 용역결과·접근성 분석
춘천·원주·강릉 정치권까지 치열
분원 조성 논의 2026년 개원 목표

강원도교육청이 이르면 이달 말 강원 특수교육원 건립 지역을 결정한다. 춘천·원주·강릉 간 유치전이 과열되자 지역부터 결정해 신경호 교육감 임기 내 개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은 1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춘천, 원주, 강릉이 다 특수교육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소모적인 논쟁이 심하다. 이르면 2월 중 지역결정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당초도교육청은 TTF를 구성해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유치전이 과열되자 지난해 발표한 용

역결과를 참고해 건립 지역부터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춘천·원주·강릉을 중심으로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정치권마저 유치전에 뛰어들어 상황이다.

건립 지역 선정에서 가장 중점적인 요소는 접근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용역결과와 접근성 등을 분석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내 특수교사·일반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용역결과에서는 원주가 설립 적합지 1위로 선정됐다. 특수·일반교사가 택한 2위 적합지는 강릉, 학부모가 고른 2위 적합지는 춘천이었다. 이에 대해 신경호 교육감은 "춘천·원주·강릉 중에서 어디가 유리한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늦어도 3월 내로 지역을 결정하고, 이어 설립 부지도 확정하겠

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올해 2회 추경부터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2층과 3층 규모의 2개동(또는 5층 이상 1개동) 분원 한 곳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지역 간 거리가 넓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해 본원과 분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 임기 내인 2026년 개원이 목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분원이 꼭 한 곳이 아닐 수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 중"이라고 했다.

강원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진로체험·직업교육과 학부모·교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프로그램 등이 종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민업 jmy409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15일 (수)

경제 06면

“벤처기업 소통 강화하자” 이달 강원지회 출범

22일 원주서 창립총회 개최

지난해 10월 설립추진위 발족

정홍걸 대표 위원장 맡아 추진

강원지역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 강원지회가 구성, 출범한다.

14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벤처기업협회 강원지회 창립총회가 오는 22일 원주 호텔인터볼고에서 개최된다. 총

회에서는 회장 선출을 포함, 향후 사업 계획 등이 결정된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현 국회의원, 정광열 경제부지사, 윤종옥 강원중소벤처기업청장과 회원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역벤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강원지회 설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강원지역의 경우 벤처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운영 중에 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한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도내 벤처기업은 619개(2022년 8월 31일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기준)로 전국 벤처확인기업(3만5215개)의 1.7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의 소통강화 및 현장애로 청취, 협력을 위한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도내 벤처기업 대표들은 지난해 10월 ‘벤처기업협회 강원지회 설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임, 강원지회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원지회는 도내 회원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회원사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 지회 창립과 함께 각종 사업 교류회, 사업설명회 등 활동을 구상 중이다. 정 위원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벤처기업협회의 도움이 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 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기업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황선우 woo6745@kado.net

2023년 02월 15일 (수)

종합 01면

江原日報

조선왕조실록·의궤 빠르면 9월 평창 돌아온다

최응천 문화재청장, 월정사 정념 주지스님 만나 밝혀

국립조선왕조실록기념관 리모델링 마치고 10월 개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보관·전시하게 될 ‘국립조선왕조실록기념관(이하 국립실록기념관)’이 올 10월 개관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14일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오대산 월정사를 방문, 퇴우 정념 주지스님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대산문화축전 기간에 맞춰 리모델링이 완료된 국립실록기념관 전시실을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월정사와 강원일보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올해 오대산문화축전이 10월 둘째주(13~15일)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대산사고본 문화재 원본의 환지본처(還至本處·제자리로 돌아감)는 빠르면 올 9월, 늦어도 10월 초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이관작업이 진행된다면 1913년과 1922년 일제에 의해 무단으로 약탈된 오대산사고본 실록과 의궤는 각각 110년, 101년 만에 평창으로의 귀환(歸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국립실록기념관으로 옮겨지는 오

대산사고본 실록은 1932년과 2006년, 2018년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되돌아온 75책, 의궤는 간나오토 일본 총리 도서 반환계획에 따라 2011년에 반환된 82책 등이다.

다만 올해 책정된 국립실록전시관 운영 예산이 당초 계획에 비해 삭감되면서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실록과 의궤를 전면 이관하는 작업은 내년엔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 국가지정문화재인 오대산사고본 실록(국보)과 의궤(보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남은 기간 수장고 등 관련 시설을 보강하는 작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월정사와 강원일보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환수위원회는 국립실록기념관 개관에 맞춰 올 10월께 세조의 ‘강원도 순행 여가행렬’ 재현행사와 NYCC 양상봉 음악회 등을 기념행사로 개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오석기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년 02월 15일 (수)
사회 04면

월 1천만원 ... 학교도 요금 폭탄

전기 34%가량·가스 2배 넘게 올라... 개학 앞두고 현장 비상
도교육청 점점 실시 후 인상폭 클 경우 추가 대책 검토 방침

“요금 인상을 예상했지만 이 정도 일 줄은...” 원주의 A고교 행정실장은 최근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통상 700만~750만원대 사이에 머물렀던 요금이 1,000만원 넘게 나왔기 때문이다. 올 1월 요금은 1,015만6,390원으로 1년 전인 2022년 1월 요금 757만원보다 34%가량 올랐다.

춘천의 B초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76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냈는데 올해 1월에는 1,000만원 대가 나왔다. 가스요금도 지난해 1월 47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인상됐다.

B학교 관계자는 “사용량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요금이 너무 올랐다”며 “도교육청이 인상해 준 학교 운영비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개학을 앞둔 강원지역 학교들도 ‘고지서 폭탄’을 받아들고 있다. 다음 달 개학을 하면 급식실을 가동해야 해 이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C학교 교장은 “개학하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기 때문에 방학 때보다 요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D학교의 경우 50

m(15평) 남짓한 학교 관사의 난방비가 29만원이나 나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이 같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앞서 올해 학교 운영비를 최저 1,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인상한 만큼 당장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만간 점검을 실시해 인상 폭이 클 경우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상 폭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3월에 실제 고지되는 금액을 본 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북주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상향 조정한 학교 운영비로도 감당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

江原日報

2023년 02월 15일 (수)
사회 05면

코로나·경기악화에 자원봉사자 반토막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점심마다 도시락을 배달하는 춘천의 A사회복지관, 각급 기관·단체에서 나온 배달 봉사자들이 매주 30~40명이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딱 끊겼다. 결국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나섰고, 업무 부담도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강원지역의 ‘자원봉사자 부족난’이 심화됐다. 소외계층을 돌보거나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공백을 겪는 실정이다.

강원도가 지난해 8~9월 도내 1만 5,8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강원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4%만 ‘최근 1년간 자원

자원봉사 참가율 8.4%로 급락
소외계층 돌봄·안전 사각 우려
자율방법대 활동 중단도 속출

봉사 활동을 했다’고 응답했다. 자원봉사 참가율은 2019년만 해도 14.6%였지만, 2020년에는 12%, 2022년에는 8.4%로 점점 하락했다.

실제로 춘천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는 올 1월 기준 7,711명으로 3년전(1만4,605명)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다.

경기 악화에 자원봉사자 부족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범죄 예방 봉사활동을 펼치는 강

릉의 B 자율방법대는 최근 전체 인원 100여명 중 10%가 활동을 그만뒀다.

매월 3회 이상,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순찰을 도는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남성 30~40대 대원이 대부분이었다. 해당 방법대 관계자는 “탈퇴 대원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직원을 내보내고 ‘나 홀로 영업’을 하는 1인 자영업자, 근무 여건이 불안정해진 직장인이 많았다”고 말했다. 팍팍해진 경제가 자원봉사자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자원봉사자들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원주의 C장애인복지관은 매일

장애인 80~100인 분량의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식당 봉사자 부족난을 겪고 있다. 조리사 1명을 제외하면 배식, 식판 정리를 할 봉사자가 2~5명은 있어야 하는데, 모두 70대 여성들이 맡고 있다.

C복지관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는 복지관 운영의 중요한 축인데, 학점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 봉사자를 제외하면 일반 봉사자는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변영혜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장은 “기관·단체들이 다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독려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15일 (수)

사설/칼럼 21면

서민 교통 시장금리 조정할 때

-은행 이자수익 '돈 잔치' 지적,가계 부담은가중

세계 금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가 이달 초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긴축 정책을 조기에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미국 내 실업률이 떨어지고 고용지표가 강세를 보여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결돼 국내에서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고금리에 서민과 자영업자의 교통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마련한 가계는, 2년 전보다 2배 안팎으로 오른 은행 이자가 큰 부담입니다. 여기에 원금상환까지 더해가 정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은행대출을 통해 영업하는 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자재와 재룻값 상승에 이자상환 부담까지 겹쳐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민경제가 심각할 지경에 이른 가운데, 은행이 이자수익으로 배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자수입을 바탕으로 희망 퇴직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할 때 제공하는 법정 퇴직금 수익원에, 1인당 적게는 3억4000만원 많게는 4억4000만원 가

량을 특별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 금융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은행은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시해 향후 정책적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권은 교통분담에 나서야 합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반드시 연동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구실로, 대출금리를 올려 과도한 수익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선택적 금융지원도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금과 대출 이자의 마진 폭을 줄이고 전반적인 시장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비 둔화와 고용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금리 조정은 필요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15일 (수)

사설/칼럼 21면

지방대 육성 교육부 아닌 범정부 조치 필요

-지원자 0명 학과 모두 지방대, 취업 불리 경제구조 해소해야

3월 신학기로 분주하고 들떠있어야 할 강원도 등 비수도권 지방대학은 신입생 총원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종로학원에서 발표한 지원자 0명인 학과가 비수도권 지방대인 것으로 나타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수치가 3년 전인 2020년도 3곳인데 비해 2023년도 올해 정시 모집에서는 26곳으로 급증해 향후 지방대 현실은 더 암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원자 0명인 학과는 비수도권 가운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제주 5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돼 신입생 부족난을 새삼 확인시켰습니다. 강원도내 1개 학과를 포함해 수도권과 거리가 먼 영남지역이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대입 정시에 앞서 수시 모집을 통한 신입생 총원도 녹록지 않았습니 다. 수시 전형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은 지방에서만 3만 3000여명으로 5명 중 1명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방대에서 다양한 제안과 조건을 제시하며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전 비수도권 지방대학

대상 클로컬대학 육성 정책을 발표해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정책 효과로 인해 이런 수치가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대학 육성 과제는 교육영역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방대 졸업생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졸업 후 취업의 불리함과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인 정서를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대학을 나와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려 해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입니다.

지방대 체질을 바꾼 뒤에 지원하겠다는 방식이 아닌 국가 교육·산업 시스템부터 변혁을 가져와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방대 졸업생이 취업의 불리함을 극복하려면 범정부적인 조치가 병행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지방대에 대한 뿌리깊은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대 육성은 교육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 범정부적인 다각적인 조치에서 나와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3년 02월 15일 (수)

사설/칼럼 19면

도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폐교 활용 모델 되기를

교직원들의 휴식과 연수를 위한 가칭 강원도교직원 수련원 장호분원 설립사업이 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 사업에 주목하는 것은 지난해 3월 폐교된 삼척시 근덕면 장호중학교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장호분원 설립이 완료되면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강릉 주문진에 있는 본원과 정선 아라리교직원수련원을 포함해 3곳이 된다. 아라리교직원수련원도 2019년 6월 폐교된 고성분교 1만1,260㎡ 부지를 이용했다. 교직원수련원 분원이 들어서는 장호마을은 '2011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곳이다.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로도 지정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도 내 폐교 활용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로 폐교가 급격히 늘어난 일본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3월 공표한 '폐교시설등활용상황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약 450곳의 폐교가 생겨나고 있다. 일본은 이런 폐교들을 사무실이나 요양시설, 대학의 위성 캠퍼스, 영어마을, 전시장 등으로 사용하며 지역재생의 기폭제로 삼고 있다. 교육청은 앞으로 폐교를 매각이나 장기 대부가 아닌 학

교로서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이용하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도내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1981년부터 2022년까지 총 474곳에 달한다. 이 중 276곳은 매각·교환·반환 등이 이뤄진 상태다. 남은 198곳 가운데 활용 중인 폐교는 149곳이다. 149곳 중 123곳은 대부(임대)가 됐고 교육청이 사용 중인 시설은 26곳이다.

앞으로도 학교 통폐합에 의한 도내 폐교는 가속화될 것이다. 학생 부족으로 통폐합 위기에 몰린 소규모 학교 및 폐교의 운영 방안이 당장의 과제로 부상했다. 방법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주민 문화 공간으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출향인들의 추억을 달래주는 정서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아울러 미활용 폐교 재산을 감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또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폐교 활용 방안은 교육청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 주민과 적극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다 같이 나서야 한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폐교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다양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주민,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폐교 재산이 지역과의 상생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江原日報

2023년 02월 15일 (수)

사설/칼럼 19면

특별자치도 지원 첫 회의, 지역 사정 잘 설명해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가 3월8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19개 장관이 모두 모여 올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결과 부처별 지원방안, 각종 특례에 대한 강원도의 설명 및 정부부처의 협조 등이 논의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시

농만 하는 것이 아닌) 진짜로 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한 만큼 지원위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의 전향적인 특례 검토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중앙부처 장관들이 공식적인 회의에 모두 참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자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 약속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강원도는 각 부처에 도의 입장을 정교한 논리로 설득력 있게 피력해야 한다. 강원도는 그동안 중앙집권적 정부 형태에서 가장 많은 규제와 제약으로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장애물로 가득했다. 수도권 2,000만 명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 및 산림보존, 군사시설

보호 등 2중 3중으로 묶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이러한 기율어지고 불공정한 법과 제도를 특별법을 통해 개선하고 자치권도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강원인의 요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태동으로 이어졌다.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접경지와 폐광지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국방과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 조치와 관련, 결정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해 줄 것을 담고 있다. 농지와 산림,

환경, 국방 분야는 강원도 전역에 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산림과 환경은 필수적 요소다. 이 분야에 규제 완화가 왜 필요

한덕수 총리 주재로 3월8일 도청서 열려

법 개정안에 접경지·폐광지 활성화 등 답아

道, 치밀한 지역 논리로 정부 설득해 나갈 때

한지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중요하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는 많은 제주도민이 기대와 설렘을 가졌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지금 성과도 있지만 그때의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부 제주도민 사이에서는 그 가치가 퇴색되고 있는 원인으로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위한 구상과 전략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역사에 있어 소중한 성과이자 계속 이어져야 할 자산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한다.